

관계 부처 합동	<b>보 도 자 료</b>	담당자는 <참고 4>참조
	2013년 6월 20일(목) 조간 (6.19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가 됩니다

-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비전 선포식 개최 -

### < 장마철 산사태, 앉아서 당하는 일 없게 한다. >

중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이번 장마철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 게릴라성 폭우에 중부지역 물폭탄이 예상된다라는 보도를 보고 뒷산 계곡 아래에 위치한 펜션에 혹여나 산사태가 덮치지 않을까해서다.

걱정되는 마음에 관할 군청에 연락해보니, 이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지표면 센서를 설치해 이상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재청과 지자체가 관련시스템을 연계해서 긴급상황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 < 3차원 공간정보로 건물 안을 내 손안에 >

소방관 B씨는 건물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태블릿PC를 통해 건물내부를 3차원으로 확인한다. 화재가 난 위치와 접근방법, 붕괴예상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도착전 화재진압과 응급구조방법을 동료들과 상의한다. 건물 실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 역시, 복합쇼핑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축구장 40배 크기의 쇼핑몰 내부를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화살표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덕분에 늦지 않게 제시간에 약속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 < '유해식품 경보' 발령으로 나쁜 먹거리 이제 그만! >

'개사료 사용 황태국', '3년된 쌀로 만든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유해 먹거리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 주부 C씨. 유해 식품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페이지에서 '식품안전'을 쳐 보았다. 그 결과 '식품나라'(식약처), '농식품 안전정보서비스'(농림부), '00市 식품안전정보' 등이 검색되었다.

이제는 '식품안전 정부포털'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다. 수입식품 원산지부터 유통과정, 부적합 식품의 제조사와 상품명까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알려준다. 또한 날씨에 따라 조심해야할 음식들, 식중독발생 지역과 발생확률까지 알려줘 우리식구 건강에 한시름 놓았다.

□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추진체계

□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

○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여, 2012년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 예컨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동·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 내용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한다.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확대 사례 (보고서 p4~5)  
분야별 기관별 사전정보공개 확대 사례(보고서 p35~38)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한다.

○ 주요 정책·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국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한다.

○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사례를 개발·운영하여 인터넷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우선,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을 개방하고,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방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 ('13.6) 2,260종 → ('17) 6,150종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 예시 (보고서 p7~12, p39~43)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NIA·KAIST, '12)

※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지하철 정보 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SK, KT 등 정보가공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었으며, 경기·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련 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 이를 통해 출생신고시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여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주요 사례 (보고서 p48)
  -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하여 안내된다.
-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 \* 현재 중앙·지방 1,304개 사업에 13조원 지원 → 통합관리로 중복·누락 방지
-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창업→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기업유형(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여 창업 및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 공장설립 승인을 7일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전자태그나 위치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스마트 폰 기반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개발하여 국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 \*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안행부), 도로이용불편사항 신고서비스(국토부), 실시간 기업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국립공원 정보 제공(환경부)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이 수립되어 과학적 행정기반이 구축된다.
  - 안전·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추진하여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범정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 ※ 빅데이터 시범과제 현황 (보고서 p49~51)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 공유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 부처간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통합을 강화하여 부처간 협업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며,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 예를 들면, 방통위·복지부 등 2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 관리 정보를 공유·연계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 부처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사례 (보고서 p19, p44~47)

□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PC나 스마트 기기로 부처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해진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 T/F 등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 국정·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

○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간 교류정원제 및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한다.

○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개인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에서 발표하였다.

○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다.

-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비전선포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남도가 정부3.0 관련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계획을, 중소기업청은 공공정보 개방을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3.0’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정보 공개·공유’에 대해 보고했다.
  - 충청남도는, ‘정보공개와 민관협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변화’에 대해 보고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관리되며,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참고 1 정부 3.0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 □ 비전과 전략



### □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li> <li>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li> <li>③ 민·관 협치 강화</li> </ul>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li> <li>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li> <li>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li> </ul>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li> <li>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li> <li>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li> </ul>



## 「정부3.0」이란?

### ○ 정 의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 방 향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
-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 <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 참고 2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요약

###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원칙) i) 사실을 있는 그대로, ii) 전과정에 대하여, iii) 국민 중심으로 공개
  - \*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의 참여자 및 이력관리 강화

#### - (대상) 예시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식품·위생)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 (치안)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 범죄현황,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등
- (가정·복지) 유치원·어린이집·노인·장애인시설 정보,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 (지역물가)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지자체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 예시②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공공사업) 하천, 도로 등 토목공사 관련 사항, 지역축제 원가정보
- (계약정보) 공사발주 세부내용 및 계약 전 과정

#### 예시③ 예산집행내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지방재정)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
- (국정감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 (방법) 시민단체 공개요구사항, 분야별 여론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공개수요가 큰 정보 파악, 선제적 공개

#### ○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

- 모든 정보는 공개원칙 및 비공개 최소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
-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

#### ○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생산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원문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임위 심의(13.6월)

##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
  - \* 교통·지리·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 ('12년) 2,260종 → ('17년) 6,150종
-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 '개방 5개년 로드맵' 수립

###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관련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지원
- 사업계획 수립-창업-기업경영 전과정에 대한 **One-stop** 지원

###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구축

- DB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표준형 전환
-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일원화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구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사위 심의('13.6월)

## ③ 민·관 협치 강화

### ○ 주요 국정과제 등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 구현

-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 확대

### ○ 국민참여 확대 및 참여·소통 채널 다양화

- 현장중심, 국민의 전자적 직접참여 확대, 전문가·정책고객 참여 활성화
- 전화·문자·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의견 등 수렴
  - \*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제안센터」 설치·운영('13.5월)

### ○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플랫폼) 구축

- 대규모 사업 및 주요 국정과제의 '정책토론' 상정,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마련

####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국정과제(140개) 및 협업과제(170개) 중 부처간 시스템 연계·통합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 식약처(위해정보시스템)-농식품부(농식품 안전정보시스템)-지자체(서울) 등 15개 시스템 연계로 식품안전정보 공유  
 ▶ **과세자료 관리 및 체납방지시스템 구축** : 국세청(국세)-관세청(관세)-안행부(지방세)-지자체 등 130종 과세정보 공유로 누락세원 발굴 및 착오부과 방지

-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조정과제\*' 지원
  -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뿐만 아니라 협업수행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및 인사교류 적극 실시로 협업 지원
  - \* (예) ODA, 유아교육-보육 통합, 물관리, 다문화가족 등
-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력과제' 지원
  - 부처간 협업으로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지원
  - 공동이용정보 및 이용기관 대폭확대\*, 공공기관 정보연계
  - \* 대상정보(249종→349종) 및 이용기관(343개→400개) 확대

####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 마련
  - 쏠 공무원들이 PC·스마트 기기로 소통·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 각 부처의 정책정보, 출장·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된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및 PC영상회의 병행 활용

- 출장·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메일·메모보고 지원
  - \* 보안문제 해결 후 결재까지 지원 추진('14년 이후)
- 지식·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17)
-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
  - (조직) 「범정부 통합정원제\*」 도입, T/F 등 과제중심형 조직 활성화, 조직진단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협업체제 재설계
    - \* 매년 전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
  - (인사) 국·과장급 개방·공모직위 확대, 계획교류, 교류정원제 도입, 중앙-지방간/정부-민간간 인사교류 확대 등
  - (예산) 협업 T/F에 예산 조정권 부여, 우수기관에 예산인센티브 제공
  - (평가) 정부업무평가에 '협업추진 실적'을 포함한 정부3.0 관련 지표 반영

##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
  -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파악 등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국가적 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수립 지원
    - \*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
  - 다양한 공공·민간정보의 분석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 지원
  - 안전, 경제 등 6대 분야 21개 시범과제\* 추진
    - \* (예) 예측기반의 자연재해 조기 감지·대응(방재청, 기상청 등)
-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 연계·공유할 수 있는 기반마련으로 시스템 중복구축 방지

##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출생, 취학, 병역, 이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서비스 제공
  - \* (예) 사망시 72종의 민원사무 중 유족연금신청 등 18종 서비스 일괄제공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민원일괄서비스 재정비(민원24)
  - \* ('13년) 이사,사망 관련 민원 → ('14~'16년) 부동산거래, 자동차 등 확대
- 정부대표포털을 통해 실생활 필요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예시) >



### ○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각종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별로 재분류한 「행정서비스맵」 제작·활용
  - \* 파급효과, 중요도 등을 감안, 장애인·출산(육아)·노인 등 3개 분야 시범실시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11개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민원 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My페이지)에서 통합 서비스
  - \* (예)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검진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민원정보 통합 제공

###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 ▶ 간단e 납부 : 위택스-과태료시스템-새올-e지로 등 관련시스템 연계
  - ⇒ 세금·공과금 통합납부로 국민편의 제고 및 징수·수납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 ▶ 재난피해주민 지원 시스템 : 복지·통신·전기·교육·주민정보 연계
  - ⇒ 재난피해 주민에게 세제 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등 혜택 통합 제공

##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맞춤형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

-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이력정보, 중소기업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기업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허가민원과」) 설치 확대
  - \* (예) 경기도 김포시(종합민원과), 포천시(허가담당관실), 양주시(민원해결과) 등
-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 구성,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해결

##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

-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센터·우체국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 집배원을 이용하여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생활상태 주기적 점검

###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 인터넷·앱 접근성 표준화 및 품질인증, 영상수화 상담, 보조기기 지급 등

##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최신 정보기술(전자태그, 위치정보 등)기반의 지능형 서비스 발굴·확산
  - \* 재난대응·민생치안·생활편의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로드맵 수립·추진

### ○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예시)

-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기능 강화(안행부), '기업마을 앱'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보 제공(중기청) 등

## 참고 3 정부3.0으로 인해 달라지는 국민생활 변화

- ① 공공정보를 적극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 1. 우리 아이 맡길 어린이집, 정보공개로 찾아준다

지난 5월 발표된 ○○구 지역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보고 놀란 5살, 3살 두 아이의 엄마 A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때문에 전전긍긍했지만,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된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사 수, 급식현황, 위반처분내용까지 확인해 보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동네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었다.

### 2. 공개대상 정보 '국민이 청구하기 전' 미리 인터넷에 공개

현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청구를 해야하고 처리기간도 여러 날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다. 이제 마우스 하나로 실시간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원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거다.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공개대상 원문정보를 인터넷에 자동 게시하는 것이다.**

### 3. 대형 국책사업,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폰방' 거치게 한다

40년째 경치 좋은 고향마을 ○○군에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마을 인근 ○○천에 댐이 건설된다는 말을 듣고 막막했다. 댐 건설로 정든 고향을 떠나 수몰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이 떨어졌다. 댐 건설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고, 주민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었다. 앞으로 이런 고민과 의견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폰방**」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된다. 댐 건설, 주거단지 개발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5천억 이상)에 대해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4. 포장된 엘리트 지식 보다 시민의 거친 의견을 소중히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와 경기도 '온통'(溫通)처럼 앞으로 정부3.0의 기본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이 행정전반에 스며들게 할 전망이다. 국민과의 협치를 통해 민·관 간 소통·협력 채널은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제 소수 엘리트의 포장된 지식보다는 다소 불합리하고 거칠더라도 시민 한사람의 절실한 요구가 더 소중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다.



## ②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1. 이제 정보만 잘 이용하면 누구나 투잡(two job)이 가능해진다

최근 B씨는 산악클라이밍 동호회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여행이 즐거웠다기보다는 늘 똑같은 패키지 여행상품에 식상함을 느꼈다. 평소에 여행도 즐기는 B씨는 자기와 같은 불만을 품은 여행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여행사를 창업했다.

### 2. 계절 타는 업종, 주먹구구식 마케팅 이제는 그만

B씨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상품개발은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을 개발('데이터 ○○길')하였다. 처음엔 어렵고 막막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씨.교통.지리.숙박정보, 국민 소비패턴 통계나 데이터, 지역별 특성 정보 등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 C씨는 이미 가지고 있던 고객관리데이터에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융합한 맞춤형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서 히트를 치게 되었고, 동업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 3. 주차 스트레스, 한방에 해결해줄 서비스 나온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직장녀 G씨는 운전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특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를 배회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여행, 외식, 쇼핑 등이 늘면서 자가용 이용 시간도 늘고, 이와 함께 골치 아픈 주차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직접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가 민간에 개방되어, G씨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비어 있는 주차 공간 및 주차장 위치, 정산 요금,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보급되어, 주차스트레스가 해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 도로 배회로 인한 매연 방출량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4. 데이터 개방으로 골목상권 되살린다.

실버세대가 집중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F마트의 K씨는 요즘 정부가 개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영업마케팅에 활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배달이나 택배서비스를 할 때 예전에는 어디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 몰라서 허둥지둥했지만, 최근에는 실버세대 밀집지역에 어떤 형태의 세대가 얼마나 몰려있는지, 소비성향은 어떤지,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미리 알고 '쇼핑약자'인 고령자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골목상권에서 소매업을 하는 작은 F마트지만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서비스질도 높아졌고, 매출 역시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 ③ 칸막이를 없애 ‘국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1.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으로 자동 접수된다.

직장인 J씨는 집 근처의 주택가 도로가 깊게 패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매번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뉴스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알게 된 J씨는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패인 도로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했더니 위치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진과 위치가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되었다.

J씨의 민원을 접수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K씨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도로 패임 정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였고, 조치 사항과 사진을 J씨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2. ‘국가표준인증 통합서비스!’ 기업 원감절감 도와준다.

플라스틱 수도관을 생산하는 L업체는 각 제품 별로 유사한 각종 인증을 취득. 유지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업체는 K마크, KS, ISO, 단체표준 표시인증, 위생안전 기준인증 등 총 6가지 인증에 1,798만원의 인증비용을 쓰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21개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표준(2만 4,000여 종), 기술기준(2만 4,000여 종) 및 인증제도(185여 개)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인증 관련 원스톱 통합 창구를 제공하여 표준인증 비용과 심사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L업체가 인증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제품개발과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이 더 급속이 늘어날 전망이다.

#### 3. 「주민참여 교통안전시스템」, 초보운전 불안 해소한다.

초보운전자 B씨는 운전이 두려움이 있었다. 차량과 교통운영센터 간 통신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한 이후,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상황과 연계하여 안개 위험지역, 사고 발생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운행시 안전에 도움을 받았다. 또한, 급제동, 급격한 차로 변경 등 위험한 운전습관을 알려주고, 졸음 운전시의 패턴을 분석하여 졸음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경고메시지를 보내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1. 출생신고 한번으로 내 아이 생애 서비스 한눈에

직장 다니며 셋째를 출산한 C씨는 출생신고만 하면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알지 못했던 '산전후 휴가급여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직장동료가 알려주었다. 신청 방법을 몰랐던 C씨는 수소문 끝에 고용보험공단에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여 90일 휴가분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지급받자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직장동료나 C씨, 그리고 정부가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다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 서비스를 알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최근 셋째를 가진 동창생이 알려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달라진 서비스에 고마워했다. 그런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건강보험료 경감'신청은 고용보험공단에, '전기료 감액'은 한국전력공사에, 출생증명 발급은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수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어질 전망이다.

### 2. 재난피해, 한 번의 신고로 7가지 정부지원 신청 끝.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D씨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복구자금 용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다. 하지만 막상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방문해야 할 곳도 많고 내야하는 서류도 너무 많아서, 정작 복구는 가족 손에 맡겨놓고 하루 종일 공공기관, 통신사 대리점, 세무서 등을 전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만으로 세제·용자, 전기·통신료 감면 등 7가지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부처간 피해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구비서류는 물론 피해사실 확인 조사 등도 최소화하여 재난 피해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3.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이제 기다리지 않고 받는다.

장애인 A씨는 예전에는 장애인 등록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 떼다가 주민센터에 접수, 한달 지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진단 받고 복지카드 나올 때까지 1~2주를 또 기다려야 했다.

복지카드 받을 때 장애인 혜택 설명용지가 주어지는데 여기 적혀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관마다 다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더욱 불편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만 하면 알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애진단을 받고 복지카드 나오는 기간도 반으로 줄어 예전처럼 한 달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행정기관의 일처리도 훨씬 더 빨라진다. 본격 시행 되면 국민도 좋아지고 공무원들의 일손도 덜게 된다.

## 참고 4 부처별 및 과제별 정부3.0 담당자 연락처

### □ 중앙부처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정일황	044-200-2056
		담당자	박재완	044-200-2059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	과장	윤정식	044-215-2530
		담당자	김형은	044-215-2544
미래창조과학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마창환	02-2110-2240
		담당자	김도경	02-2110-2213
교육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주명현	02-2100-6062
		담당자	박기원	02-2100-6067
외교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과장	정영수	02-2100-7129
		담당자	박지현	02-2100-7133
통일부	행정법무담당관	과장	최영준	02-2100-5690
		담당자	이홍열	02-2100-5695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권영범	02-2110-3111
		담당자	이경희	02-2110-3087
국방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배정원	02-748-6530
		담당자	정유진	02-748-6504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김형중	02-2100-3022
		담당자	유지영	02-2100-43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과장	김현환	02-3704-9221
		담당자	지성구	02-3704-9246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통계담당관	과장	윤동진	044-201-1311
		담당자	김호균	044-201-1332
산업통상자원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이용필	02-2110-5241
		담당자	김효	02-2110-5245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김문식	02-2023-7140
		담당자	정지윤	02-2023-7142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	과장	김동구	044-201-6350
		담당자	여수호	044-201-6351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송홍석	02-2110-7027
		담당자	조경선	02-2110-7030
여성가족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인정숙	02-2100-4581
		담당자	김기창	02-2100-4582
국토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어명소	044-201-3213
		담당자	신태상	044-201-3216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조일환	044-200-5150
		담당자	김성희	044-200-5151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기열	02-2100-2551
		담당자	염철승	02-2100-2555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장재욱	02-2020-5110
		담당자	염선미	02-2020-5053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권오상	043-719-1451
		담당자	박남수	043-719-1473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과장	정재수	02-397-1041
		담당자	남아주	02-397-1062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이종우	042-481-7660
		담당자	정기섭	042-481-7605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고임세	070-4056-7082
		담당자	조진석	070-4056-7081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임병권	042-481-2033
		담당자	김오승	042-481-2048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남재우	042-481-2637
		담당자	황종열	042-481-2991
방위사업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김대석	02-2079-6220
		담당자	장창환	02-2079-6278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민갑룡	02-3150-2102
		담당자	박상민	02-3150-1117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김찬선	02-2100-5121
		담당자	배동현	02-2100-5130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황권순	042-481-4710
		담당자	박종민	042-481-4711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과장	김종배	031-299-2935
		담당자	인우충	031-299-2940
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박기남	042-481-4040
		담당자	권민정	042-481-4046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과장	신권식	042-481-4306
		담당자	김광곤	042-481-4356
특허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정인식	042-481-5051
		담당자	김정열	042-481-8617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신도식	02-2181-0322
		담당자	김명규	02-2181-0332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이능호	044-200-3070
		담당자	윤용태	044-200-3080
해양경찰청	창의성과담당관	과장	김용진	032-835-2029
		담당자	김보희	032-835-2229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총괄담당관	과장	박노익	02-2110-1320
		담당자	엄정환	02-2110-1383
공정위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한철기	044-200-4255
		담당자	배현정	044-200-4256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변영한	02-2156-9610
		담당자	진선영	02-2156-9612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임윤주	02-360-2641
		담당자	김지영	02-360-2646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과	과장	김은환	02-397-7381
		담당자	최수진	02-397-738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강승완	02-2250-2263
		담당자	송순철	02-2250-2228

□ 자치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	과장	김종근	02-2133-2910
		담당자	박세경	02-2133-2917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과장	송삼종	051-888-1510
		담당자	김봉철	051-888-1502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과장	김철섭	053-803-2370
		담당자	박주환	053-803-2386
인천시	정책기획관	과장	김진용	032-440-2045
		담당자	김인수	032-440-2131
광주광역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과장	김정훈	062-613-2110
		담당자	고인엽	062-613-2362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과장	신태동	042-270-3001
		담당자	박문용	042-270-3010
울산광역시	기획관	과장	신동길	052-229-2110
		담당자	김재준	052-229-2127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과장	민경태	044-300-2110
		담당자	권혜진	044-300-2123
경기도	기획담당관	과장	정상균	031-8008-2880
		담당자	김철수	031-8008-2116
강원도	기획관	과장	이태은	033-249-2110
		담당자	우준형	033-249-2462
충청북도	성과관리담당관	과장	민광기	043-220-2250
		담당자	배정원	043-220-2261
충청남도	혁신관리담당관	과장	조원갑	041-635-2130
		담당자	이순종	041-635-3184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과장	오택림	063-280-2110
		담당자	박현규	063-280-3142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과장	정승준	061-286-2110
		담당자	김형수	061-286-2131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과장	편창범	053-950-2110
		담당자	전영하	053-950-2230
경남도청	행정과	과장	박문길	055-211-3210
		담당자	김신호	055-211-3232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과장	이행수	064-710-2230
		담당자	박정식	064-710-2235

□ 10대과제 안전행정부 담당자 연락처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	연락처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정보정책과	정병욱 서기관	02-2100-1884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공공정보정책과	박경주 사무관	02-2100-1887
③ 민·관 협치 강화	제도총괄과	조병곤 사무관	02-2100-3410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행정과 전자정부지원과	신승렬 서기관 정준우 사무관 전종길 사무관	02-2100-1868 02-2100-1869 02-2100-3552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협업행정과 정보자원기반과	신승렬 서기관 김해숙 사무관	02-2100-1868 02-2100-3633
	조직기획과	허승원 서기관	02-2100-3488
	심사임용과	이익수 사무관	02-2100-1724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 사무관	02-2100-1889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공공정보정책과 민원제도과	고규선 사무관 정민선 사무관	02-2100-1888 02-2100-4442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민원제도과 제도총괄과	안우진 사무관 조병곤 사무관	02-2100-3457 02-2100-3410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민원제도과	신동승 사무관 안우진 사무관	02-2100-3695 02-2100-3457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창조정부기획과 스마트서비스과	양태원 사무관 강성용 사무관	02-2100-1859 02-2100-1672